

전북교육, 변화가 필요하다

6 · 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내 최대 관심사는 교육감 선거다.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에 맞서기 위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는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과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미영 전 대통령직무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도내 여러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역교육 현안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얼굴 알리기와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6인의 예비후보자들 중 하나인 서거석 예비후보를 만나 정책과 소신, 철학 등을 들어봤다.



Q. 먼저,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계기는?

A. 전북대 총장 퇴임 후 외국에서 1년 여를 보내고 명예퇴직을 하면서도 도내 교육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교육이란 유·초·중·고·대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단계를 밟아가야 함에도 지난 8년간 전북 교육은 편향 속에 균형을 잡지 못했다. 앞으로 4년간 이런 체계가 계속되는 건 안 되겠다는 신념하에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됐다. 주변에서는 장관급인 국립대학 총장 8년을 보내고 이전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고민했지만 현 김승환 교육감의 강력한 대항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서게 됐다. 전북교육이 균형 잡힌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도전' 해 반드시 '승리' 하도록 하겠다. 지난 현 교육감의 8년은 불통과 오만, 독선의 시간으로 꼴지 교육의 폐해가 나타났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Q.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전북교육이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며 격려를 해주신다. 지난 8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현 교육행정의 불통과 독선, 독주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이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아

균형잡힌 전북교육 이루기 위해 모든걸 내려놓고 출사표 던져

도내 중고교생 학력증진 위해 교사는 전문성 신장해야 교육청, 교사 업무 경감을

학생안전복지와 신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전북교육박물관 건립할 것

학생·교사 인권 존중 교육현장 풍토 조성해야

울러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도내 중·고교생들의 기초학력과 학력증진에도 힘을 써달라는 요구가 많은 등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Q.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상황은 어떠한가요?

A.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중3 기초학력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근 연속 5년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

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북지역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6.3%로, 11개 혁신학교 도입 지역 중 충북과 인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력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선 교실이 살아 있어야 한다. 선생님들은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하고, 학생들은 흥미를 갖고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설계 단계부터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디자인해 교실에서 실천해야 한다.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 인성과 실력을 함께 기르는 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Q. 전교조의 노조 전임 허용과 해직교사 복지 문제에 관한 입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 헌법이 보장한 노조 권리와 적폐 청산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전교조 전임 허용과 해직교사 복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이 규정한 보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뿐 원칙적으로 헌법

에서 부여한 단결권 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조 전임은 법률이 아니라 노사간 협약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고, 교원노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교조 노조 전임도 인정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인권의 대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헌 소지 의견을 표명한 것과 함께, 고용노동부에도 법외노조 철폐를 적극 권고해야 한다.

Q. 학생인권예 비해 교원의 인권이 위축돼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A.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신바람 나는 학교를 만들어야 아이들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이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 인권에 더해 교사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교원 인권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지원팀을 구성해 윈스톱 형태로 인권을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협력 병·의원을 지정 운영해 교권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사의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Q. 다른 공약들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A. 우선 교육청에 '학생안전복지과'를 신설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 학생복지 문제를 전담토록 하겠다. 아울러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교육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전북교육박물관'을 건립하고 손주손녀 등하굣길 안전 어르신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다. 또 지난 10년 동안 다른 시도에 비해 수업료를 더 지불한 도민들에게 수업료를 되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고교 무상 수업료를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Q. 앞으로 전북교육이 현재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해법을 제시하시죠?

A. 위기일수록 원칙과 기본이 중요하다. 너무 한쪽에 편향된 정책으로는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고, 모든 학생의 재능과 꿈을 키울 수 있는 수월성 교육도 제대로 해야 한다.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선생님의 인권 또한 존중하는 교육현장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상민 기자



사람이 도시를 품격이 전주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